

GM 협력업체 자금 지원 효과 톡톡

도, 경영안정·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 "조기소진 예상되면 지원규모 탄력 조정"

전북도는 군산조선소 및 한국GM 군산공장 관련 협력업체들을 위해 올해 3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GM 협력업체 등 특별자금 지원이 상당수의 협력업체들의 경영안정 및 자금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특별자금 시행기관(경제통상진흥원, 전북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지원 실적을 파악한 결과, 4월 6일 기준 총 110건 138억원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별 지원실적은 특례보증 연계 긴급경영안정자금 40건 54.5억원, 기업운영 필수경비 무이자 지원은 49건 24.5억원, 도 긴급경영안정자금 11건 33억원, 도 정책자금(기존대출) 거처기간 연장은 10건 26억원이 지원됐다.

특히, 기업운영 필수경비 무이자 지원은 협력업체들의 호응이 높아 총 지원규모 50억원 중 50% 정도가 이미 소진됐다.

이는 GM 군산공장 가동중단 등으로 매출실적 감소로 인해 협력업체

들이 보증서, 담보 제공 등에 어려움이 있을 것을 예측하여 보증한도(8억원)를 초과한 업체도 특례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취급 지침을 마련한 것이 큰 효과를 거둔 요인이다.

전북도는 협력업체가 현 신용보증기준상 8억원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을 고려하여 특례보증 재원 45억원을 보증기관에 예비비로 출연하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자금소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감안, 지원 실적을 지속

적으로 파악하여 일부 자금의 조기 소진이 예상되는 경우 지원규모를 탄력적으로 조정하여 조기소진으로 인해 자금을 지원받지 못하는 협력업체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은 "금년 특별자금은 군산지역에 닥친 경제위기의 충격 완화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해 특별자금 투입을 통해 우선적으로 협력업체 안정화 대책을 긴급히 시행하는 것으로, 이를 기반으로 협력업체들이 산업구조의 미래를 향한 체질 개선을 해나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회의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이마빌딩에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전북농협, 올 상반기 농축협 신규직원 채용

전북농협(본부장 유재도)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인재 채용 확대를 위해 2018년 상반기 전북 관내 농·축협 신규직원 30여명을 채용한다고 9일 밝혔다.

지역본부 주관으로 지역농협은 시·군 단위로, 품목농협은 자체농협 단위로 채용한다.

또한 서류전형·필기시험·면접·신체검사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아울러 지역인재 발굴에 초점을 뒀던 채용 공고(9일) 전일 기준으로 응시자 본인, 부·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응시가능 지역으로 제한한다.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는 농협채용 홈페이지(with.nonghyup.com)와 채용 전문업체(잡코리아 홈페이지)에서 10일부터 16일까지이다. /최수호 기자



9일 전북도청 접견실에서는 송하진 도지사,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 홍보과장 외 4명이 참석해 유권자들의 희망공약 열서가 들어있는 우리동네 공약 우체통을 송하진 도지사에게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우리동네 희망공약집' 예비후보자들에게 전달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우리동네 공약 우체통을 통해 수집된 도지사 및 교육감에게 바라는 유권자 희망공약을 담은 '우리동네 희망공약집'을 6일, 9일 도지사·교육감 예비후보자들에게 전달했다.

아울러 각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각 시장·군수 예비후보자들에게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바라는 희망공약을 전달했다.

우리동네 희망공약집은 지난 3월 한달간 도 및 각 구·시·군선거관회의 공약우체통으로 접수된 3,895건의 우리동네 희망공약을 경제(761건), 교육·환경(314건), 사회·복지(1,307건), 정치·행정(300건), 교통·문화

(144건), 기타(151건) 등 분야별로 정리한 것이다.

도지사에게 바라는 희망공약(772건)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경제·사회 분야는 일자리 창출(122건), 경제 활성화(69건), 노인 및 생활보호대상자 등 복지확대(33건) 등이, 지방자치·정치분야는 다문화정책, 전주시 통합과 관련한 안 등이 제안되었고, 단순의견으로는 전북을 발전시켜 달라는 의견이 다수 제안됐다.

이 외에 각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바라는 희망공약도 경제분야에 집중되어 있었으며, 특히, 일자리 창출, 복지 향상 등 도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공약이 다수 제안되어 유권자와 후보

자 모두 지역의 주요 현안과 관심사를 확인할 수 있어 생활밀착형 정책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도지사에게 바라는 희망공약은 경제분야에 집중된 반면, 교육감에게 바라는 희망공약(546건)은 방과 후 돌봄교실 확대를 비롯해 학교폭력 예방대책과 교육의 질 향상 등 다양한 바램이 담겨있다.

또한 후보자가 제시하는 공약의 실현가능성에 대한 궁금증과 함께 명확한 공약 제시 및 이행에 바라는 의견이 다수 제안되어 정책선거 실현에 대한 유권자의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동네 희망공약을 전달받은 예비후보자들은 유권자들의 희망공약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김진성 기자

통일부 "남북 실무회담 이번 주 한두차례 더"

통일부는 2018 남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회담이 이번 주에 한두 차례 더 열릴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이번 주 실무회담이 한두 차례 더 열릴 것으로 예정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백 대변인은 "정확한 실무회담 날짜 등에 관해서는 "정확하게 관련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한편, 남북은 지난 5일 정상회담 의전·경호·보도 관련 실무회담을, 지난 7일 통신 실무회담을 각각 한 차례 개최했다. /뉴시스

6·13 지방선거 전북도지사 전주시장 예비후보 동향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 잘 새길 것"

김춘진 전북도지사 예비후보 개소식

김춘진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예비후보(사진)가 지난 8일 완산구 효자동 3가 문학타워 5층에 선거사무소를 마련하고 개소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는 안호영국회의원, 이상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김진배 전 국회의원 등 3천여 명이 참석해 김 예비후보의 개소식을 축하했다.

김 예비후보는 "중병에 걸린 전북경제를 살리고, 전북도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3선 국회의원 과 문재인대통령후보 전북총괄선대위원장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전북도당위원장을 지낸 자신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

참석자들은 "침체된 전북경제회생방안과 전국 1위 전북지역의 미세먼지대책, 이행기간조차 명시하지 않은 상대후보의 1.23 공약 평가 및 건강이상설" 등을 놓고 열띤 질문을 벌였다.

김 예비후보는 "도민들의 기대와 성원을 잘 새겨서 증상에 힘 있는 후보로서, 새로운 전북을 만들어 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진성 기자



"영세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

더불어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 예비후보(사진)가 지역 소상공인에게 커다란 부담이 되고 있는 카드수수료를 지원한다는 선거공약을 발표했다.

9일 김 예비후보는 전주지역 내에 연매출 1억원 이하 소상공인까지 카드수수료를 제로화하는 방안을 내용으로하는 생활형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공약을 밝혔다.

이번 공약은 1단계로 연매출액의 48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지원하고, 2단계로 연매출 1억원 이하 사업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상공인을 지원할 경우 필요한 연간 40억원(1단계)에 대해서는 정부가 내년 1월에 카드수수료를 인허가할 계획이어서 공약 이행 전주시의 부담은 줄어들 것이 김 후보측의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그간 정부는 영세한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카드가맹점 수수료 인하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신용 카드 정책으로 도입한 의무납부제가 수수료 협상력이 낮은 영세가맹점에게는 큰 부담이 되고 있다"면서 "영세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지원을 위해 간담회와 관련조례 제정 등을 통해 카드수수료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경선 일정 유권자 알 권리 침해"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주시장 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현웅 예비후보(사진)가 "전주시민들(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9일 이현웅 전주시장 예비후보측에 따르면 지난 8일 민주당 전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에 '전주시장 경선 일정 조정 및 후보검증'이란 제목으로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전북도당측에서 경선 일정을 너무 서두르게 추진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지방선거에 나설 단체장과 지방의원 등의 경선을 오는 23일까지 마무리 지을 예정이다. 이는 남북정상회담(4월27일) 전까지 공천을 마무리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현웅 예비후보측은 이번 경선 일정이 잘못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예비후보는 "경선 일정을 너무 서두르다 보니 예비후보는 시민들에게 정책 등을 알릴 기회가 없다"며 "타 시도의 경선일정에 비해서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후보검증을 충분히 해야 유권자들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며 "공당으로서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규남 기자



"재벌개혁, 대기업 생산력 무너뜨리는 방식은 안돼"

김상조, "재벌개혁 없는 경제민주화 안되고는 전방 경제 생활할 때 느끼는 갑질개선이 가장 중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사진)은 9일 "재벌 개혁은 우리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생산력을 무너뜨리는 방식으로 진행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경제민주화 방향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청와대가 9일 공개한 '경제민주화 지지' 국민청원 답변 영상에 출연해 "재벌은 이른바 재벌 개혁의 대상이자 동시에 경제의 소중한 자산이다. 과거에도 그러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기업들을 국민 모두의 소중한 자산, 국민 경제의 소중한 자산으로 거듭나게 만드는 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라며 "대주주와 CEO가 늦지 않게 적절한 타이밍에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에 책임을 지는 구조를 만들어가는 것이 재벌 개혁의 목표"라고 거듭 설명했다.

그는 "재벌 개혁 없는 경제민주화는 안되고는 전방이다. 재벌 개혁이 아무리 중요한 과제라도 국민 한사람 한사람이 느껴야 성공"이라며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이나. 많은 시민들이 경제 생활할 때 느끼는 갑질, 갑을개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1987년 헌법 119조 2항에 경제민주화 조항이 들어갔다. 지난 30년 동안 정권이 바뀌었고 모든 정권은 경제민주화를 가장 중요하게 내세웠다"면서 "3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평가

를 하자면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 않다. 목표가 틀린 것이 아니라 수단이 잘못됐고, 접근 방법이 잘못됐다. 내 생각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선진국이라 불리는 나라들은 외형적 모습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경제민주화를 상당 부분 달성했다. 불가능한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서 "이번 정부마저 경제 개혁에 실패하면 우리에게 미래는 없다.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해 곧 2차·3차 협력업체를 포함한 하도급 분야 대책을 발표하고, 상반기 중 대리점 대책 등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실현 계획 관련 "국민의 공감대는 상당 정도 확보됐지만 법률적, 예산 뒷받침이 필요한 과제들을 중기 과제로 설정했다"면서 "그것을 위해 하반기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을 갖고 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법만으로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달성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일반 경제법으로서 법무부 상법 개정도 필요하다"며 "다양한 수단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조화시킴으로써 그 전체의 정부 정책 패키지로서 효과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실패를 안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청원은 지난 2월 한 간담회에 참석한 김 위원장이 "경제민주화도 국민의 참여를 통해 이뤄져야한다"고 발언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2월 8일 청원 게시판에 처음 올라와 한달 동안 20만7772명의 국민 추천을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뉴시스